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보고서

2024. 6. 10.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26개 단체)

〈 연락처 〉

공익법단체 두루 jkim@duroo.org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jkang6109@gmail.com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sjkang@hopeandlaw.org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chewan.s@minbyun.or.kr

보고서 작성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재단법인 4.9통일평화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목차

서문.....	4
02 고문의 범죄화 및 처벌 관련 주요 형법 개정사항.....	5
03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5
04 피구금자의 법적 보호.....	6
05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후속조치.....	8
06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및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집회 관리 조치.....	9
07 국가보안법.....	11
08 독립된 고문조사 매커니즘, 통계 등.....	11
0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13
10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개선 조치.....	15
11 법집행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교육.....	18
12 수용시설에서의 공간, 조건, 운동, 재활, 의료 등.....	18
13 독방 감금.....	20
14 대용감방.....	21
15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 현황 및 예방조치.....	22
16 사형제도.....	22
17 군대 내 인권침해 대응 조치.....	23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피해구제 조치.....	25
19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27
20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및 기타 보호조치.....	30
21 출입국향 난민신청제도 및 이민자 구금시설 개선 조치.....	32
22 인신매매.....	34
23 아동 체벌 금지.....	38
24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군사 재판 및 영창제도 현황.....	39
25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및 비자의 입원 조치 현황.....	41
26 테러방지법.....	42
27 코로나19 시기 교도소, 병원, 기타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조치.....	44
28-1 탈시설.....	46
28-2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48
28-3 성소수자.....	49
28-4 기업과 인권.....	50
28-5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의 권리.....	51

서문

대한민국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대한민국 제 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해 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 전 쟁점목록의 각 쟁점을 다루는 ‘대안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 심의 전 쟁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쟁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권리담지자와 함께 긴밀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위원회에 전달하여 합니다. 각 쟁점별로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옹호활동에 필요한 추천 권고도 포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은 중요한 기로에 처해 서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후퇴를 목격하였습니다.¹ 소수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심화하였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공공 기관과 제도는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로, 이번 심의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한 독립보고서는 일부 인권위원의 반대로 인해 핵심 권고가 제외되고 권고 내용이 약화되었습니다.² 독립보고서안 심의 과정에서 한 상임위원은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하였습니다.³

대한민국에서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내 옹호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심의 과정에서 이 보고서를 면밀히 고려해주실 것을 위원회에 요청드리며, 심의 과정을 통해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¹ See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24: South Korea, <https://www.hrw.org/world-report/2024/country-chapters/south-korea>; Korea Pro, South Korea faces human rights backslide in 2023, 4 January 2024, <https://koreapro.org/2024/01/south-korea-faces-human-rights-backslide-in-2023/>.

² 한겨레, [단독] 인권위 유엔 보고서에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폐지’ 빠져, 2024. 6. 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373.html.

³ 프레시안, 인권위원 "인권은 '인간 탈을 쓴 짐승'에 보장 안 돼", 2024. 6. 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60518472190948>.

02 고문의 범죄화 및 처벌 관련 주요 형법 개정사항

정부는 고문을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고문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 자체의 예방적 기능, 그리고 협약상 고문의 정의와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불처벌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⁴ 정부는 ‘모든 형태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를 비롯한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의 정의와 적용범위는 협약상 고문의 정의보다 훨씬 좁다. 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제125조는 고문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사법적 해석에 맡긴다. 나아가 동조의 적용범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정부행위자의 ‘교사·동의·목인 아래’ 행동하는 비정부행위자, 그리고 직무 밖에 행동하는 공무원수행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가 국가보고서에서 인용한 다른 국내법 역시 협약상 고문의 구성요소를 포괄하지 않는다.⁵ 이는 협약 제4조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 「형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고문을 협약 제1조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별도의 범죄로 구성하라.

03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고문범죄를 유형과 죄질별로 나누어 공소시효를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고문범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협약과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에 어긋나는 주장이다.⁶⁷ 나아가 정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해당 법안 이외에도 강제실종범죄 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

⁴위원회는 대한민국 제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고문 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예방 효과와 협약상 고문의 정의와 국내법에 통합된 정의 간의 간극이 야기할 수 있는 불처벌의 위험을 강조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에 당사국이 주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⁵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고문을 인도의 반한 죄의 한 유형으로만 언급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는 「형법」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항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⁶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AT/C/KOR/CO/3-5, 30 May 2017, para. 10.

⁷ UN General Assembly,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ES/60/147, 21 March 2006, para. 6-7.

하여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는 법안⁸이 발의되었지만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대한민국은 협약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형사법 체계 내에 완전히 편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을 통해서만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 현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례는 7건⁹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 및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제되지 않는다. 그 결과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범죄 가해자들, 특히 과거사 사건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공소시효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사면법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¹⁰ 그 결과 고문 및 학대행위 범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이 된 사례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고문 및 학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국가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과거사 피해자들이 소멸시효의 초과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¹¹

- 고문 및 학대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 고문 및 학대행위 피해자의 민사상 배상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고문 및 학대범죄가 사면의 대상이 되지않도록 사면법의 개정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

04 피구금자의 법적 보호

정보에 관한 권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그러나 영장이 없이 진행되는 긴급 또는 현행범 체포에 있어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가 구속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고 있다. 사법경찰관들은

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⁹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 등, 13세 미만,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살인, 살인죄 등

¹⁰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6956&lang=ENG

¹¹ KBS NEWS, “‘소멸시효’ 위헌에 법무부, UN에선 “존중” 소송에선 “책임 없어” 탄소리 [주말엔]”, 2023. 10. 1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3014>

¹²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0539&lang=ENG

체포 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뿐, 체포된 사람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또는 현행범 체포가 된 피의자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피의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언어접근권

형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등은 체포 또는 구금 절차에서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구금에 있어 절차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난민법,¹³ 출입국관리법¹⁴은 한국어가 통하지 않거나 외국인이 한국어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통역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에 미숙하더라도 행정절차 집행 등에 있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를 인정하고 있지만 영장없이 체포된 사람에게 기소 전 국선변호를 보장하지는 않고 있다. 기소 전 수사절차에서 법률구조가 공백인 것이다. 한편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회의 임기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었다. 체포적부심사에 있어 국선변호는 필수적으로 제공되지만,¹⁵ 당사자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전 단계에서는 국선변호가 보장되지 않는다.

영장없이 체포된 사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¹⁶에 따라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의 허용 여부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구금기관과 방어권

형사소송법은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24시간 이내에 체포의 적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¹⁷. 즉 체포적부심사는 48시간 이내에 개시되지만, 그 판결을 받는 것이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영장청구서를 변호인에게 신속히 교부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의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언급하였듯이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구금의 구체적 내용은 기재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피구금자의 가족들이 시스템을 통해 구금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¹³ 「난민법」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3622&lang=ENG.

¹⁴ 출입국관리법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⑥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은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에게는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1640&lang=ENG

¹⁵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0539&lang=ENG

¹⁶(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1조

¹⁷ 형사소송규칙 제16조

- 체포된 사람들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라
- 형사적, 행정적 구금절차에 있어 모든 외국인에게 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라
- 수사 전 과정에서 예외없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
- 체포된 사람의 24시간 이내의 의료접근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라
- 48시간 이내에 체포의 적부를 최종 판단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
-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서의 사본을 적시에 교부하라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구금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하라

05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후속조치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된 형사절차

2018. 6. 5. 1심에서 구은수(당시 서울청장)는 무죄, 신윤균(당시 서울청 제4기동단장)은 벌금 1,000만 원, 살수요원 2인 중 한석진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윤석은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¹⁸ 항소심에서 피고 4인 모두 7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¹⁹ 구은수는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2023. 4. 13. 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경찰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²⁰

평화적 집회 보호와 보장을 위한 개선의 부재

정부는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8개 사항 중 7개 권고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그러나 권고 중 많은 부분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살수차의 원칙적 사용금지를 위한 법률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정되지 못했다.²² 시행령 등 하위규범을 개정하면 살수차를 재도입이 가능하며, 최근 경찰이 살수차의 재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²³ 정부와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보고 진압과 검거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의 입장을 수립하며 국제인권기준에 역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²⁴

¹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고합1051 판결

¹⁹ 서울고등법원 2019. 8. 9. 선고 2018노1671 판결

²⁰ 대법원 2023. 4. 13. 2019도12915 판결

²¹ 정부보고서, para. 29-31.

²²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432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2430)

²³ MBC NEWS, “캡사이신에 진압봉, 살수차까지··'민주화 시계' 되돌리는 경찰”. 2023. 6.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9632_36199.html

²⁴ 서울신문, “경찰, 시위 진압·검거로 강경 대응… 민변 “허가제 집회는 자유 침해””, 2023. 9. 22.,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9/22/20230922008008>

경찰은 야간 시위,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 등이 불법이라며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하고 있다.²⁵ 또한, 경찰은 야간문화제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집회참가자들을 이격시키거나,²⁶ 분신사망한 노동자의 추모를 위해 설치된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등 집회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²⁷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았을 때,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업무지침의 수립, 집회시위의 패러다임 전환, 금지통고의 최소화 등의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8개의 권고를 이행하라
-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물리적 사용, 부당한 체포, 과도한 금지 및 제한 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06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및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이후 집회 관리 조치

1주기 추모집회 관련 재판절차

1주기 추모집회 때 세월호참사²⁸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이뤄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특별한 진상조사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인정은 없었다. 오히려 집회를 주최한 인권활동가들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²⁹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패소한 상태로 확정되었다.³⁰ 한편 국가는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은 2018년에 이르러서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³¹

국가책임 관련 재판절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와 참사 이후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국가배

²⁵ HANKYOREH, “Korea moves to ban late-night rallies in move criticized as circumventing courts”, 22 September 2023,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09709

²⁶ 한겨레, 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야간문화제를 ‘불법’ 규정”, 2023. 8. 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5243.html

²⁷ 연합뉴스, “경찰, 양회동씨 분향소 강제철거...민주노총 4명 체포(종합)”, 2023. 5. 31.,

<https://www.yna.co.kr/view/AKR20230531172851004>

²⁸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²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³⁰ 뉴스1, “‘경찰 물대포 피해’ 기자, 1심 뒤집고 2심서 일부 승소”, 2017. 12. 26.,

<https://www.news1.kr/articles/?3188613>;

³¹ 경향신문, “경찰이 세월호 집회 단체에 낸 손해배상, 배상 없이 마무리”, 2018. 9. 3.,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809032311005>.

상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³²이 2023. 3. 3. 국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되었다.³³ 다만 법원은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참사 이후 국가의 불법적 대응행위³⁴ 중에서 기무사에 의한 불법사찰만을 불법행위로 인정한 한계가 있다.

법원은 참사에 책임있는 국가 고위공무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시키는 등 세월호참사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한 고위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참사 당시 적절한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해경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³⁵

피해가족들의 재화와 보상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재화와 보상을 위한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유가족들이 요청해온 추모공원은 특별법³⁶에 따라 건립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불충분한 협조로 그 건립이 지체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피해자들의 재화를 위한 지원되는 의료지원금은 기간의 제한으로 2024. 4. 15. 지원이 중단되었다.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이 없는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관계부처는 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³⁷ 잠수사를 피해자에 포함하고 의료지원금을 기간의 제한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2024. 5. 28.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만 연장하고, 잠수사를 피해자에 포함하는 내용은 삭제한 수정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참사조사위가 2022. 6. 30. 활동을 종료하면서 관계부처에 피해자의 만족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권고를 하였지만, 그 권고 전반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³⁸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

경찰은 2023. 5. 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집회를 해산하고, 참여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며,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살수차를 재사용을 하기 위한 내부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수차 사용기준이 법률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남기 씨 사망 이후 대통령령으로 수

³²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18나2047920 판결

³³ 한겨레, “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책임 판결 확정…법무부, 상고 포기”, 2023. 1. 3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7652.html

³⁴ 기무사 불법사찰, 허위사실 유포, 반대집회 지원,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및 강제해산 등

³⁵ The Korea Times, “Supreme Court confirms acquittal of 9 ex-Coast Guard officials in Sewol ferry sinking”, 2 November 2023, [Supreme Court confirms acquittal of 9 ex-Coast Guard officials in Sewol ferry sinking - The Korea Times](https://www.koreatimes.co.kr/News/Read/A2024040916060001321); THE MARITIME EXECUTIVE, “Korea Supreme Court Upholds Coast Guard Officers' Acquittal in Sewol Loss”, 2 November 2023, <https://maritime-executive.com/article/korea-supreme-court-upholds-coast-guard-officers-acquittal-in-sewol-loss>.

³⁶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³⁷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10년 됐으니 의료 지원 끊는다’는 대한민국 정부”, 2024. 4. 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916060001321>

³⁸ KBS NEWS, “‘사참위 권고 대부분 ‘미이행’…그 사이 참사는 반복됐다 [더 많은 ‘세월’ 흘러도]⑤”, 2024. 4. 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600>

립된 사용기준은 언제든지 폐기 될 수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생명안전공원을 신속하게 건립하라.
- 정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재활과 완전한 배상을 위해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지원금에 대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특별법³⁹을 개정하라
-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2022. 6. 30.자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 정부는 세월호참사 1주기에 이루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세월호참사 당시와 이후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

07 국가보안법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는 총 398명으로 연평균 40명에 달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 전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무려 57명⁴⁰이 기소되었는데 이는 지난 8년간 가장 많은 수치이다. 2024년 4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는 5명이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일부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21대 국회에는 2건의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과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7조를 삭제하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⁴¹을 하였다(2017헌바42 등). 하지만 이적표현물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으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다. 또, 동법 7조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최종견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였고 특히,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지적하며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는 등 유엔 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7조 개정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7조는 즉각 삭제하라.

08 독립된 고문조사 매커니즘, 통계 등

³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⁴⁰ 3 e-나라지표, 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⁴¹ Constitutional Court rules National Security Act as constitutional for 8th time
<https://en.yna.co.kr/view/AEN20230926006900315>

국가보고서에서 언급된 법무부 인권국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구이고, 그 업무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진실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도 아니므로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 조사를 위한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이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방문조사 등 고문 및 가혹행위 조사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지만, 충분한 재정적·물적·인적자원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고, 미인가 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들이 조사의 범위에 배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⁴²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만 조사하고,⁴³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⁴⁴ 모든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도 않는다.

고문이 자행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사전 예고 없이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방문조사 시 원칙적으로 구금시설의 관리자에게 조사의 취지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⁴⁵ 또한 방문조사 시 대화 내용의 비밀도 보장되지 않는다. 구금시설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이 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⁴⁶ 현행 법령은 대화 내용의 녹음·녹취를 금지하고 있으나,⁴⁷ 교정시설 직원이 가청거리에서 대화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⁴⁸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 직원이 참석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⁴⁹

고문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료 증거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구금시설 수용자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 의료법이 당사자나 가족의 동의 없는 의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그 예외로 △검사·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 △의료사고 피해구제 △감염병 역학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⁵⁰

-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국가예방기구의 설립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해야한다.
- 고문에 대한 진정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전 예고 없이 미인가 보호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에 방문조사를 할 수 있

⁴²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⁴³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⁴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⁴⁵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⁴⁶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5항

⁴⁷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5항

⁴⁸ 다만, 면담 대상 수용자가 진정인이거나 진정을 하려는 사람일 경우 청취할 수 없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6항). 또한 직원이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⁴⁹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00호) 제16조

⁵⁰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개정하라.

- 유엔 인권메커니즘을 무시하고 반인권적인 자격 없는 국가인권위원 임명을 중단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에 시민사회의 의견은 물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18회에 걸친 분야별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모두 빠졌고 미등록 이주민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기재하는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22년에 이미 수립되어야 할 제4차 인권NAP 즉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8)은 2024년 4월에서야 발표되었으나 성소수자의 권리와 장애인 탈시설정책 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성평등’은 아무 설명 없이 ‘양성평등’으로 바뀌었다. 4차 인권NAP 수립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수렴 절차는 매우 미비하였고, 공청회에는 반인권적이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일삼는 세력들까지 초대하여 공청회가 파행되는 것을 방조, 묵인하였다. 이는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인권정책기본법을 2021년 12월에 발의하였으나, 이를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NAP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하라.
-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보장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국내 모든 구금 장소와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군사 기밀보호와 직무상 기밀누설 방지 등과 충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문방지 예방기구가 없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 비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70여개의 구금시설과 국방부 소속의 모든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조사 할 인력과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방문조사 대상이 되는 구금·보호시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출입국항 내 출국대기실과 난민신

청자대기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⁵

-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고 고문방지 예방기구를 설립하라.

10 북한이탈주민, 난민신청자 관련 권리보장 개선 조치

북한이탈주민

자유권위원회의 2015년 및 2023년 최종견해와 고문방지위원회의 2017년 최종견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했다.⁵⁶ 2018년과

⁵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 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 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⁵⁶ 1)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능한 최소한 기간의 구금 보장, 2) 심문 시를 포함 구금된 전 기간 동안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기간 상한이 3개월로 축소되었으나 보호에 관한 결정기간에 제한이 없어 여전히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⁵⁷ 여전히 국정원이 조사와 구금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호인접견권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 보호결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관련당국과 절차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행 관행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하는 접근으로 고문 및 가혹행위에 준하는 인권 침해와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국정원이 위촉한 인권보호관 1명이 시설내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고 예방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⁵⁸

[표] 2017년~2023년 북한이탈주민 수 (통일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	188	168	202	72	40	35	32
여	939	969	845	157	23	32	164
합계	1,127	1,137	1,047	229	63	67	196

위 통일부 통계상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공식적으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사람 수를 의미하고 처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들어 온 사람, 이중 심사 결과 강제퇴거된 사람, 심사 중 사망한 사람 등에 통계는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 송환과 관련된 이의신청, 재판청구, 집행정지 등에 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은 고문방지협약과 관련해서는 그 협약의 가입이 가능한 다른 국가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2019년 11월 7일 북한에서 온 2명의 어부에 대한 추방과 관련하여 협약 제3조 의무에 따른 당사국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정부는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입국과 동시에 장기 구금 및 강압적 조사가 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3) 정착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를 결정하는 조사절차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 구별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⁵⁷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신청을 한 날로 한다)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입국 인원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보호 결정 등) 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⁵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인권보호관) ① 보호신청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보호시설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보호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루어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폐지하고 난민인정절차에 준하는 비강압적 절차를 도입하라.

- 정부는 즉각 자유누리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호인접견권을 보장하고, 보호불허 또는 강제추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절차에서 국가정보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정착과정에서 올바른 권리보장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와 관행을 정비하라.

난민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0-2%에 불과하다.⁵⁹ 정부는 난민인정심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난민신청과정에서 통번역 지원 및 조력은 전무하다. 난민법상 난민심사관은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하고, 사실상 심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나 관리감독을 규정한 법령은 없다. 통역인 풀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조사를 생략하고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난민인정심사 부적격제도’ 도입을 추진⁶⁰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2015년 이후 난민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불허부하겠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출입국항 절차에서는 여전히 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절반 이상의 난민신청자들이 불허부 결정을 받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되지 못하고 있다. 불허부 처분’을 받아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공항에 억류되어 1년 이상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리하는 ‘출국대기실’에서 지내야 하는데, 그 외 주거시설 등의 대책은 전무하다. 출국대기실에는 따로 취침 시설이 없어 평상위에서 모포를 덮고 취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하루에 한 끼 기내식이 제공될 뿐이다. 그마저도 공간상 여유가 없어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야 한다.

한편, 정부 통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중 대다수(501명)은 인도적체류 지위를 받았는데, 한국의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신청자와 다를 바 없는 임시적 체류자격으로 사회적 권리에서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특히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인정자

⁵⁹ 2019년 0.4%, 2020년 0.4%, 2021년 1%, 2022년 2.03%, 2023년 1.53%. 2023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18,838건의 난민신청이 있었으나, 단 10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기존난민인정자의 가족결합자와 유엔난민기구가 인정한 난민을 초대하는 재정착 난민을 모두 포함한 수이며,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는 단 76명에 불과하다. 난민인권센터, “[통계] 국내 난민 현황 (2023.12.31기준)” (2024. 4. 10.), <https://nancen.org/2405>

⁶⁰ 이에,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수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와 달리 가족결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으며, 한국에 있는 가족의 체류도 보장되지 않아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은 건강보험 적용, 취업허가 등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단속과 추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 당사국은 출입국항에서의 회부심사 절차를 남용하여 공항에 난민신청자를 장기 구금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모든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신청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충실하고 전문적인 난민심사제도 운영으로 난민인정률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심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난민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11 법집행 공무원 대상 고문 및 가혹행위 관련 교육

국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검찰, 경찰 공무원에 대해 일부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1) 고문의 절대적 금지와 협약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2) 자유박탈에 관여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관련 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가보고서도 인정하듯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가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고문의 절대적 금지와 협약의 조항들, 이스탄불 의정서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의 효과나 영향을 파악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고문의 절대적 금지와 협약의 조항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와 기록에 관한 지침서(이스탄불 의정서) 등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12 수용시설에서의 공간, 조건, 운동, 재활, 의료 등

과밀수용을 인권침해로 보고 국가의 수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수용정원 대비 수용율은 118.1%에 이른다.⁶¹ 여성교도소인 청주교도소는 정원 대비 수용율이 132.7%인 초과밀수용 상태이다. 소년교도소는 김천소년교도소 단 1곳으로, 수용률은 2022년 3월 기준 약 88%이다.⁶² 법무부는 내부지침을 통해 수용자 1인당 수용 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19일 동안 인당 2.41㎡의 면적에서 수용되어 있던 사례를 인권침해로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⁶³

정부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⁶⁴ 연령 하향으로 수용자의 증가가 예상되자 19세 미만 수형자를 성인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⁶⁵ 이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한다는 국제인권기준⁶⁶에 반한다.

현행 법은 수용자의 가석방신청권을 부정하고 있어, 가석방은 수용자의 권리나 교정시설의 의무가 아닌 정부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정부는 2021년 형기의 80%라고 하는 실무상 가석방 기준을 다소 완화하고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보면 그 후 가석방 허가율은 소폭 증가한 74.5%로서 2018년 92.4%에 달하던 것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⁶⁷

정부는 교도관, 의료인력, 공중보건 의사 인원에 대해 2020년까지의 통계만을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 의료인 정원 117명 중 실제 인원은 89명으로 25%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2개 시설 중 38개 시설은 정규 직원으로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⁶⁸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경우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⁶⁹ 가령 2019년 청주소년원의 수감 청소년 100명 중 98명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상담 대상이었다.⁷⁰ 또한, 소년원 내에는 정신과 의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전국 10개의 소년원 중에서 7개 소년원은 정신과 의무관이 결원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보호소년의

⁶¹ 인권평화연구원,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책보고서, 2023

⁶² 파이낸셜뉴스, “하나뿐인 소년교도소 수용률 90% 수준..교정효과 떨어진다”, 2022. 4. 4., <https://www.fnnews.com/news/202204041805456845>

⁶³ 국가인권위원회 2023. 12. 1.자 23진정0856800 결정

⁶⁴ 법무부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2022.10.26

⁶⁵ 의안번호 19222, 제안일자 2022.12.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안)

⁶⁶ Rule 11 of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⁶⁷ 법무연수원, 2023 범죄백서, 2024

⁶⁸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21방문0000300)

⁶⁹ 연합뉴스, “소년원생 10명 중 3명꼴 정신질환...”, 2022. 9. 27.,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157900001>

⁷⁰ 헤럴드경제, “소년원 수감자 중 98%가 상담대상이었다...치료인프라부터”, 2022. 10. 28.,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28000169>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소년보호시설에서의 의료처우 향상에 필요한 의료소년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보호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 치료는 불충분하다.

교정시설의 물질적 조건과 관련하여, 2016. 8.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갇힌 수용자 두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수용 거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이러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르면 각 시설마다 온수 공급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며 겨울철에 목욕시간도 1주일 1회, 15분으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⁷¹ 운동의 경우 유엔 만델라규칙은 최소 1시간의 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집행법 시행령은 최대 1시간의 운동을 보장하여,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운동시간은 국제인권기준에 못미친다.

보호장비의 경우 사용시간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호장비의 사용을 교도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023년 국가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수용자에 대해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을 최소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⁷² 한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에서도 수갑,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포승에 더해,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⁷³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수용자 1인당 거실 면적을 법에 명시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밀수용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 가석방을 확대하고 가석방신청권을 수용자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
- 교정시설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부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보호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적정온도, 온수공급, 목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 보호장비의 사용 시간과 보충성의 원칙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 형사처벌 가능 최소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이 다른 가해자와 같이 취급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라

13 독방 감금

형집행법 제108조 제14호는 금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

⁷¹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22방문 0000200)

⁷² 국가인권위 2023. 4. 20.자 22진정0514100 결정.

⁷³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3항

조 제2항은 징벌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2까지 가중하여 45일까지 징벌로서의 독방감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부과도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로서의 독방감금의 상한선을 15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법무부는 권고를 불수용하였다.⁷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 중에는 102일간 징벌로서 독방구금된 2021년 진정사건,⁷⁵ 114일간 징벌로서 독방구금된 2023년 진정사건 등이 확인된다.⁷⁶

법령⁷⁷으로는 징벌 차원에서 독방에 감금된 피구금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무관이 별도의 모니터링은 독방 감금 전 및 감금 중 수시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의무관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사건의 경우에도 총 102일간의 독방 감금 기간 동안 의무관에 의해 실시된 건강확인 25회에 불과했다.⁷⁸

징벌을 결정하는 징벌위원회의 경우 교정시설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나 외부위원은 모두 교도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징벌결정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징벌 부과에 대한 직접적인 항소권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징벌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행정심판 내지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원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징벌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 징벌로서의 독방 감금의 최대기한이 15일을 넘지 않도록 형집행법령을 개정하라.
- 수용자에게 실효적으로 구제를 보장하도록 위법한 징벌 부과에 대한 효과적인 불복절차를 마련하라.

14 대용감방

2020년 상반기가 되어서야 미결수용자 대용감방이 완전히 폐지 되었다.⁷⁹ 구금시설이 신축되거나 기존시설의 이전, 재건축, 증축, 개축 등이 되었거나 예정에 있지만 과밀수용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하라.

⁷⁴ 국가인권위원회, 18방문0001500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⁷⁵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0880 결정

⁷⁶ Korea Times, “Inmates should not be subjected to solitary confinement for extended period: rights watchdog”, 7 September 2023,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6/113_358677.html

⁷⁷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62199&lang=ENG

⁷⁸ 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0880 결정

⁷⁹ 한국일보, “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을 상반기 안 폐지”, 2020. 1. 13., <https://v.daum.net/v/20200113182359889>

15 교정시설 내 사망사건 현황 및 예방조치

정부는 통계자료로 사망 수용자 및 자살 수용자의 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연령, 성별, 유형,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수용자 사망 통계의 허점은 이른바 형집행정지제도에 있다.⁸⁰ 위중증 수용자가 형집행정지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사망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는 형집행정지되는 수용자의 수도 통계자료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⁸¹

구금 중 적절한 의료적 조치의 미비로 인한 수용자의 대표적인 사망 사례가 이른바 ‘부산구치소 사망사건’으로, 정신질환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었고 결국 사망하였다.⁸² 정부는 내부 감찰 후 약 20여명을 징계하였으나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 교도관 중 형사상 책임을 진 사람도 없다.⁸³

- 수용자 사망과 관련한 통계에서 형집행정지 수용자 및 형집행정지 후 사망 수용자의 수를 공개하라
- 수용자가 사망한 후 실시되는 내부 조사의 결과보고서와 부검보고서를 유족에게 송부하라

16 사형제도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25년 넘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하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24년 4월 기준, 총 59명의 사형확정자가 있고 이중 법무부 소속 구금시설에 55명, 국방부 소속 구금시설에 4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지난 8년간 2명이 수용 중 사망 하였다. 정부는 2020년과 202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했다. 국제사회는 2023년 유엔의 대한민국에 대한 4차 UPR 권고(A/HRC/53/11)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CPR/KOR/CO/5) 등 수 차례 <사

⁸⁰ 국가인권위는 7. 5.자 21방문0000300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⁸¹ 이데일리, “'죽어야 교도소 나오나'...논란의 '형집행정지' 개선방안은?”, 2022. 10.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96086632489968&mediaCodeNo=257>

⁸² 연합뉴스, “구치소서 숨진 공황장애 수감자 14시간이나 손발 묶여있었다”, 2024. 5. 21.,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1160400051>

⁸³ KBS NEWS,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18명 징계·인사조치”, 2020. 7.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85893>

형제도 폐지와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5년 사형제도 폐지 의견표명을 한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매년 세계사형폐지의 날에 사형제도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정부는 2022년 7월,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사형제도 존재 여부가 인권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며,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시설 정비를 지시하고 사형제도와 사형집행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심지어 법무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전제하지 않은 채,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하여 마치 형벌강화만이 유일한 범죄 예방수단인 것처럼 여론 물이를 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 정부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사형집행 중단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라. 모든 사형확정자들을 무기수로 감형하라.
- 국회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즉각 비준하라.

17 군대 내 인권침해 대응 조치

정부보고서는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정 집단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존재만으로도 잠재적 인권 침해가 발생하며 위와 같은 보호규정은 무력화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실질적 적용 빈도와 관계 없이 공포와 차별의 환경을 조성한다. 군 기강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군 효율성을 위해 이 조항은 필요하지 않다.

2023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 합헌(재판관 5 : 합헌, 재판관 4 : 위헌) 결정을 내렸다.⁸⁴ 이 결정은 지난 21년 동안 군형법상 추행 조항에 대한 네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 2022년 4월 대법원은 병영 밖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군 장교에게 무죄를 선고하여⁸⁵ 향후 이 조항의 적용범위는 줄어들 수 있으나 여전히 조항 자체만으로 잠재적 침해가 발생한다.

국회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고 인사상 독립성과 예산상 자율성이 없어 실효성의

⁸⁴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7헌가16, 2020헌가3(병합), 2017헌바357, 414, 50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⁸⁵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한계가 있다. 불시 부대방문권한이 없고, 자료제출 요구권이 제한되며, 방문조사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⁸⁶ 한편, 사망사건 입회에 있어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수사권이 민간에 이전되었음에도 군 수사기관 외에는 입회를 요구할 수 없다.⁸⁷ 최근에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인권옹호자들을 모욕하고 군사망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도 하였다.⁸⁸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성)폭력, 폭언, 가혹행위 신고의무 및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조문을 두고 있으나⁸⁹ 이 법 조항이 2016년 6월 시행된 이래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덧붙여, 국방부와 각 군 인권센터가 2020년부터 연 3천 건 가량의 상담을 제공하고,⁹⁰ 국방부 조사본부(군사경찰)가 연 5천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지만,⁹¹ 대부분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조사 없이 종료되고 있다.⁹² 게다가 약 5분의1 가량의 사

⁸⁶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군인권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2)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3) 국방부장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⁸⁷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 (2) ...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

⁸⁸ See qx45ak1d, dated on 8 March 2024 (address to the Special Rapporteurs on human rights defenders;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orture; the promotion of truth).

⁸⁹ 「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1)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43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⁹⁰ 국방부에서 2023년 군인권센터에 정보공개한 자료(10951746): 국방부 및 각 군 인권센터 상담 건수

연도	2020	2021	2022	Jun-2023
건수	3,032	4,122	4,078	3,306

⁹¹ 국방부에서 2023년 군인권센터에 정보공개한 자료(11036681): 국방부 국방헬프콜 건수

연도	2020	2021	2022	Jun-2023
성관련 문제	29	66	110	82
범죄신고	110	204	275	148
병영생활 고충	58,239	56,189	50,068	26,297

⁹² 국방부에서 2023년 군인권센터에 정보공개한 자료(10951746)를 군인권센터가 재가공한 자료

연도	2020	2021	2022	Jun-2023
심리지원	15.8%	32.9%	32.0%	36.6%
정보제공/해결책 제시	69.6%	48.5%	47.9%	44.0%
지휘관 전달	14.0%	17.8%	18.9%	17.9%

건 처리를 지휘관에게 의존하는 양상이 있다. 한편, 민간인 등이 투입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⁹³ 열악한 근무여건과 높은 PTSD 위험,⁹⁴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⁹⁵ 종합적으로 볼 때, 군 내부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군 외부 단체나 기관과의 협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 성인 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라.
- 군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라

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피해구제 조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장관은 피해자들의 참여와 동의 절차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이하 ‘2015 한일합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 되었음을 밝혔다. 고문방지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 인권 기구들은 수 차례 우려를 표하며 국제 인권 기준에 맞게 ‘2015 한일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⁹⁶ 그러나 거듭된 국

군사경찰/감찰 이첩	0.51%	0.88%	1.13%	1.08%
------------	-------	-------	-------	-------

⁹³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전문상담관) (1)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⁹⁴ 2022년 8월 발표된 총 63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 400명이 참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담관 1인당 평균 내담자 수는 943.7명(최소 20/ 최대 2,500명)이었고, 45%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며, 50%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한다고 답했다. 18.8%가 PTSD 증상을 보고했는데 이는 소방관(5.7%)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고, 17.5%는 내담자의 자살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공공운수노조 & 일과건강(2022).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⁹⁵ 국방부에서 2023년 군인권센터에 정보공개한 자료(10951746)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평균 근무연수는 4.5년이었으며, 63%는 2년 계약직 신분이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 일과건강(2022)에 따르면, 상담관은 매년 7-19회 정도 업무평가를 받아야했다.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에 따라 내담자의 본인/타인 생명 위협 또는 사고위험, 기본권 침해 인지 시에는 지휘관이 요구할 경우, 내담자 동의/통지 없이, 상담결과를 보고하고, 동령 제27조에 따라 자살 발생시 인사에 불이익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지휘관의 책임을 상담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⁹⁶ 2016년과 202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C/JPN/CO/7-8/para 28.-29, CEDAW/C/KOR/Q/9/para. 10), 2017년 고문방지위원회(CAT/C/KOR/CO/3-5/para. 47),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C/JPN/CO/10-11/para. 27), 2023년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54/24/Add.1/para. 84), 2024년 제112차 ILO 연간 보고서, 협약·권고 적용에 따른 전문가 위원회, p.395)

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의 합의로 인정했다.⁹⁷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⁹⁸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구체적인 방안 없이 ‘합의 준수’ 입장만을 되풀이하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피해자들이 2016년 12월 28일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⁹⁹¹⁰⁰ 한국 정부는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5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¹⁰¹,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인권유린에 관한 해결 의무를 거부하고, 역사적 사실 부인과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맞물려 대한민국 내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 피해사실 왜곡이 늘어나고 있으며 2차 가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¹⁰² 2022년 11월 10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¹⁰³ 그러나 발의 이후 약 2년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기되었다. 2024년 5월부터 대한민국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새로 법안을 발의해야 할 상황이다.

⁹⁷ 2023년 1월 26일 제4차 대한민국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https://webtv.un.org/en/asset/k1b/k1b7mk3j0q>, 2023년 제54차 인권이사회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국가 답변 (A/HRC/54/24/Add3. Rev.1/para. 46)

⁹⁸ 2023년 제54차 인권이사회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국가 답변 (A/HRC/54/24/Add3. Rev.1/para. 46)

⁹⁹ “Court win for ‘comfort women’ upheld after Japan decides not to appeal ruling in damages suit,” Yoo Jee-ho, YONHAPNEWS, December 9, 2023, <https://en.yna.co.kr/view/AEN20231209000900315>

¹⁰⁰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2021나2017165 판결은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 적용했을 때 “피고에게 국가 면제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¹⁰¹ “Foreign ministry says it respects ‘2015 comfort women deal’ following high court ruling, Yi Wonju, YONHAPNEWS, November 24, 2023, <https://en.yna.co.kr/view/AEN20231124005000315>

¹⁰² “Former Yonsei professor faces jail term for calling ‘comfort women’ voluntary prostitutes, Yoon Min-sik, The Korea Herald, Dec 15,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1215000548>

¹⁰³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대표로 총2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피해자와 유족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사망하였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로 인해 가족을 구성할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대한민국 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이 어렵기에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안번호[211819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L2J1U0B1V3E1A7S4M3F2D2Q7U1Y4

2024년 기준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9명뿐이며¹⁰⁴, 고령의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2023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시급한 과제를 시급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¹⁰⁵

-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서 어긋난 ‘2015 한일합의’를 파기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를 보장할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라.
-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요구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조치를 취하라.

19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한국 정부는 가정폭력 범죄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접근금지 및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약칭)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¹⁰⁶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정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검거율은 20%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미진¹⁰⁷하고, 피해자 보호 처분 역시 작동하지 않고 있다.¹⁰⁸ 2017년 고문방지위원회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교육 및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되면서 피해자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므로, 가해자가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¹⁰⁹한 바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은 삭제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형사처분이 아닌 상담수강명령 등

¹⁰⁴ “Another death leaves only 9 surviving Korean “comfort women”, Ko Byung-chan, HANKYOREH, May 3, 2023,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090418

¹⁰⁵ 2023년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을 위한 특별보고관 보고서(A/HRC/54/24/Add.1/para.85)

¹⁰⁶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정부보고서, 제98항,106항

¹⁰⁷ 2023년 경찰청에서 권인숙 의원실의 제출한 자료, <가정폭력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225,609건 중 검거된 건수는 44,816건으로 단 19.8%만이 검거되었다. 검거가 된 인원 52,146명 중에서도 67.3%(35,108명)는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¹⁰⁸ 2023 대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 처리 건수 25,074건 중 46.9%(11,756건)가 불처분되었다. 처분된 사건 중에도 상담위탁(22.9%), 사회봉사·수강명령(11%)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접근행위 제한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0.4%에 불과했다.

¹⁰⁹ 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7.

보호처분을 하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¹¹⁰

한국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 및 특수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며 강력한 처벌의 효과를 제시하였다.¹¹¹ 하지만 성범죄는 다른 흉악범죄에 비해 기소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¹¹²,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¹¹³ 현재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¹¹⁴은 삭제되고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통념이 작동하여 성폭력 범죄사건이 제대로 처리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현행법상 아내강간이 처벌 가능하고, 대법원의 판례(대법원2012도14788 판결)에 따라 별도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¹¹⁵ 보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흥기를 사용한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강간죄가 인정된 경우이며, 동시에“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강간죄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여 한계가 크다. 또한 해당 판례는 아내강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동 법률이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해당 판례만으로는 부부강간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한국 정부가 집계하는 성폭력 관련 범죄통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가 분류되지 않아, 형사처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2017년 고문방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와 쉼터 제공 보장을 권고¹¹⁶한 바 있다. 그러나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가 생활하는 쉼터는 현재 주거 면적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¹¹⁷ 쉼터 퇴소 이후 주거지원 시설 및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부족한 실정으로 피해자가 안정적 주거를 보장받지 못한다.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서 ‘젠더 기반 여성폭력’대응 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며¹¹⁸, 여성폭력

¹¹⁰ 2023년 경찰청에서 권인숙 의원실의 제출한 자료, <가정폭력 수사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에 의하면 가정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2018년 34%에서 2022년 4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¹¹¹ UN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정부보고서, 제99항,100항

¹¹²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2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성폭력 피의자 31991명 중 42.9%에 해당하는 1만3740명이 기소됐으며, 구속된 경우는 1535명(4.8%)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범죄자 기소율(30.3%)보다는 높지만, 살인(기소율 68.8%), 강도(66.9%), 방화(53.8%) 등 다른 흉악범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수치다.

¹¹³ 2022년 여성폭력통계 322P

¹¹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2년 강간피해상담 분석>에 의하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기관을 통해 집계한 강간 사건 총 4,765건 중 직접적 폭행·협박이 없었던 강간은 62.5%(2,979건)에 달했다.

¹¹⁵ 제6차 정부보고서, 105항

¹¹⁶ UN 고문방지위원회, 대한민국 3·4·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17.

¹¹⁷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쉼터의 시설 설치기준 면적은 (입소정원) X 6.6 m²로 국토교통부의 최저 주거면적 14 m²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¹¹⁸ 2023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여성’은 ‘가족’, ‘성별’ 등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고, 여성폭력 관련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 6대 핵심 과제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예산 축소¹¹⁹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편, 현재 여성폭력 사건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톱킹의 정의를 행위로만 나열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스톱킹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의 경우, 범죄의 특성에 맞는 처벌 조항이 부재한 상황¹²⁰이다.

- 가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가해자 기소 및 처벌을 통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 폭행·협박을 기본으로 하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 아내 강간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장하라.
- 스톱킹처벌법의 정의규정에 행위의 나열 외 포괄적 규정을 두어 스톱킹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 주거지원 시설 및 임대주택 물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쉼터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여성폭력정책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부를 유지·강화하고, 예산을 안정화하라.

이주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3건 발생했으며, 전국의 이주여성전문상담소의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¹²¹ 2023년 기준, 정부 차원에서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핫라인으로는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이주여성쉼터가 있는데,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통역을 제공하는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 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아내 가출 등 한국인 남성들이 주장하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어 젠더폭력 피해 상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주여성상담소는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상시 지원 가능한 언어는 2-3개에 불과하다.

‘여성폭력’을 뺐다.

¹¹⁹ Proposal to abolish gender equality ministry reemerges as key issue ahead of elections: Women’s groups demand Yoon to appoint new minister. (2024, February 23). The Korea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4/113_369380.html

¹²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 할 수 있는 법인 「가정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상 가정폭력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새로운 형태의 입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¹²¹ 2024년 여가부 권익보호과 제공 (이자스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의 경우 2022년에 비해 703건이 증가한 11,050건으로 전체 상담에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폭력 상담의 경우 2022년에 비해 300건이 증가한 1,849건이다.

정부는 핫라인 - 상담소 - 쉼터 등 공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행 지원체계에는 결혼이주민 위주의 체류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로 인해 광범위한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정책은 한국인의 법률혼 배우자를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체류 및 지원을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이주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의 인지 없이는 자녀의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

-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과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확대하라.
-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기반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체류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라

20 여성 이주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및 기타 보호조치

인신매매 피해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당사국은 2014년부터 외국인전용유홍업소에 대하여 유홍업소의 실제 현황이 신고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고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또는 부당한 처우가 있는지 점검할 목적으로 정부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사전에 점검 대상 업소에 점검 예정임을 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동점검은 실효성이 없다. 사용자들은 여성들에게 거짓 답변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여 유홍업소를 운영하는 불법 운영 사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은폐한다. 2020년부터 예술·홍행분야(E-6)의 체류 연장 시 비자 소지자가 직접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별지표는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비영어권 이주민의 접근성이 낮다. 또한 작성 시 동행한 업주나 기획사와 분리되지 않는 환경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실제로 작성하기 어렵다. 또한 식별지표 작성 내용에서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드러나도 즉각적인 분리 없이 동행한 업소 관계자와 귀가하도록 한다.

국내 생활 외국인 여성이 성폭력 범죄, 성매매, 상습폭행 및 학대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부여되는 G-1-11비자의 경우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 사실에 대한 법적(소송, 수사, 재판 등)과정 등의 진행 과정에서만 허가가 되고 쉼터 입소, 의료, 치료회복 등을 사유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 또한 수사관은 성착취 피해 현장을 적발해도, 피해자를 자발적 행위자로 판단하여 국내 법적 지원제도와 G-1비자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 퇴거 시킨다. 또한 G-1-11비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체류자격외활동을 매번 신청해야하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활동가, 통역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단순노동이 가능한곳만 취업을 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 대상으로 법적 과정을 진행해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외국인전용 유홍시설 방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고지 없이 조사를 진행하라.

- E-6 비자 연장시 상담원이 업주와 분리된 환경에서 비자 소지자와 대면 조사하여 인신매매 식별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비영어권 이주민에 대하여 통역 지원하라.
- 인신매매 식별지표 작성 결과 인신매매 피해자로 드러날 경우 즉시 업소 관계자와 분리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비자 허가 기준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성착취 피해 회복 활동(의료·심리지원, 쉼터입소)을 위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하라.
- 성착취 피해에 관한 공무원 교육을 의무화하라.

이주노동자 착취

정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소는 2023년말로 모두 폐쇄되어 더 이상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산을 지원해 운영했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44개소의 상담 전담자 인건비도 모두 삭감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한 상담 기능이 모두 중단되었다¹²².

계절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압류, 근로계약위반, 브로커를 통한 착취 행위, 이탈방지 목적의 담보설정 등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¹²³. 또한, 도서지역에 있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의 허가없이 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등, 사실상 감금되어 노동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한 필리핀 정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한국으로의 계절노동자 파견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다¹²⁴. 필리핀 하원에서는 2024년 2월 27일 한국에서의 계절노동자에 대한 장시간 노동과 학대등에 관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¹²⁵

정부는 인종차별집단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수년간 불법 체포와 폭력을 자행하고 이 과정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자국민보호연대’는 전국을 돌며, 미등록으로 추정하는 이주민을 폭력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하여 당국에 인계하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중 리더인 박진재는 유튜브 채널¹²⁶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관련영상을 업로드하여 인종적 편견과 혐오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박진재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 후보로

¹²² ‘Korea to shut down foreign worker support centers despite labor expansion’
Korea Herald Sept. 14,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914000617&ACE_SEARCH=1

¹²³ “임금 갈취에 험박”...실체 드러난 ‘브로커’ [계절근로자 브로커 추적] 2024. 3. 22. KBS뉴스

¹²⁴ DMW to regulate deployment of OFWs to Korea under sisterhood deal, February 19, 2024, Philippine News Agency,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s://www.pna.gov.ph/articles/1219142>

¹²⁵ Facebook of Philippine House of Rep. Marissa Magsino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422841083575693&id=100075494157207&mibextid=oFDknk&rdid=wRKSfQCe1qpVSQb

¹²⁶ Park Jin-Jae TV, <https://www.youtube.com/@TV-fx7dk>

출마하여 인종혐오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했다¹²⁷. 일부회원은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협박과 갈취로 체포되기까지 했다¹²⁸. 그러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회원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들의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등 또한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

- 이주노동자 통역, 노동, 법률 및 생활 상담을 확대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및 인력을 대폭 확대 하라.
- 계절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권압류, 근로계약위반, 착취, 이탈방지 목적의 감시와 담보설정등을 조사하여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 인종차별집단을 조사하여 처벌하라.
-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1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및 이민자 구금시설 개선 조치

공항에서의 난민 불회부 결정

난민신청자가 공항에서 불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 공항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신청자가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강제출국을 시키지는 않으나 공항 내에 구금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포기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¹²⁹

법무부의 난민신청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는 한 번의 회의에서 약 천 개의 사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난민신청자는 신청 기간, 이의신청 기간을 불문하고 강제퇴거 사유가 발생하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될 수 있다.

이주구금 제도

¹²⁷ 'Far-right lawmaker candidate forcefully detains migrant workers', March 28, 2024 / Korea Herald,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40328050529&ACE_SEARCH=1

¹²⁸ 2024. 4. 22. 충청북도 경찰청을 자국민 보호연대 일당중 일부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폭행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미등록외국인 대상 폭행·갈취 '자국민보호연대' 일당 구속 송치' 연합뉴스, 2024. 4.22.

¹²⁹ The Korea Herald, Hidden lives of terminal dwellers in South Korea, 15 May,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515000710>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사실상 무기한 구금을 허용하고 있다.¹³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구금의 상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구금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사법부 등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이주구금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¹³¹ 이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위 법을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위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구금 상한은 36개월이며 재구금이 가능하다.¹³² 구금 개시는 종전과 같이 법무부에서 심사하고, 연장은 법무부 산하의 내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또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아동의 구금에 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이 없다.¹³³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영유아도 부모와 함께 구금되는 관행이 존재한다.¹³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구금된 18세 미만 아동은 총 225명이고,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구금된 아동의 평균 구금기간은 7.7일, 최장 구금기간은 140일이다.

한편,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보호 외국인에게는 제한된 공간만이 주어지고, 보호실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며 엄격한 규율을 강요받는다. 나아가 이주구금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자해 및 타해 방지를 위한 긴급한 경우’에 특정인을 격리하거나 경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¹³⁰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¹³¹ Voice of America, “South Korean Activists Urge Better Treatment of Asylum-seekers,” 2 January 2022, <https://www.voanews.com/a/south-korean-activists-urge-better-treatment-of-asylum-seekers/6378557.html>; 2020Hun-Ka1, 2021Hun-Ka10 (consolidated) Case on Detention of Deportees with No Upper Time Limit, <https://english.court.go.kr/site/eng/ex/bbs/List.do?cbIdx=1143>. On March 23, 2023,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 6-to-3 opinion held that Article 63, Section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given that the statute allowed a person under a deportation order to be detained while not setting a maximum time limit on the detention. The Court explained that the provision violates both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thus infringing the physical freedom of the detainee.

The Korea Herald, “Extended detention of foreign nationals subject to deportation is unconstitutional: top court”, 24 March, 2023,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324000538>.

¹³² 법무부공고 제2024-140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7530?>

이와 상반되게 2023년 10월 발의되어 계류 중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2125009,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20일(연장할 경우 최대 100일) 이내로 정하고,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기간 연장을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¹³³ 2017년 이주아동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¹³⁴ 생후 10개월된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된 사례, 생후 26개월된 아동이 50일 동안 구금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26자 결정,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조문¹³⁵을 활용하여 사실상의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2021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출신 난민신청자가 독방에 갇히고 손, 발목을 포박 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이른바 고문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¹³⁶

- 당사국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구금의 상한을 정하고, 이주 구금의 개시 및 연장 시에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 당사국은 ‘자유박탈아동 국제연구(UN Global Study on Children Deprived of Liberty)’에 부합하도록,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부모, 임산부, 장애인, 난민 등에 대해 구금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구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구금 대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이주구금 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이주구금 시설 내 고문사건의 재발방지와 손해 배상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2 인신매매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인신매매 정의 규정

당사국의 형법은 인신매매 행위를 팔레르모 의정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매매’로 정의하고 있다.¹³⁷ 인신매매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정의로 인하여 관련 조항이 신설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 5건 만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나아가 형법의 정의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 유죄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¹³⁸

¹³⁵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¹³⁶ The Observers, Surveillance footage reveals shocking treatment of migrant in South Korean detention, 6 October 2021, <https://observers.france24.com/en/asia-pacific/20211006-moroccan-migrant-detained-south-korea>

¹³⁷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¹³⁸ 최근 수사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현금 40만원에 거래했다고 자백한 남성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자 성매매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판결은 당사국의 법원이 ‘매매’의 증거로 현금 거래에 대한 물증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해당 사건에서 자백

시민사회 구성원들¹³⁹과 UN 전문가들¹⁴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팔레르모의정서에 따른 정의가 아닌 '인신매매등', '인신매매등범죄'라는 별도의 정의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혼란을 야기하였다.¹⁴¹

외에 피고인들이 인신매매를 행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허진무(2021.3.19.), “인신매매범 잡으면 뭐하나...‘인신매매’로 처벌 못하는데”,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3190600035>

¹³⁹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2021.2.8), “[성명]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인신매매특별법 제정하라!” <https://apil.or.kr/press-releases/17511>; ;인신매매특별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2021.3.5) “[보도자료]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 특별법 요구” <https://apil.or.kr/press-releases/17827>

¹⁴⁰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노예제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보내는 편지(2021.3.15) OL KOR 2/2021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Issues/Slavery/SR/JointOpenLetter_OL_KOR_15.03.21.pdf

¹⁴¹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인신매매등범죄”란 인신매매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라. 「청소년 보호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바. 「근로기준법」 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사. 「선원법」 제167조제3호의 죄

아. 「장애인복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5호의 죄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인신매매 퇴치 조치의 부족

당사국의 근로감독은 부족한 근로감독관의 수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² 이로 인하여 취약한 노동자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3월 기준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1215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을 통한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⁴³

당사국은 취약한 이주노동자가 고용된 사업장을 단속하는 것이 인신매매 퇴치 조치라고 밝혔으나 단속은 인신매매의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못한다. 유흥·마사지점 단속 이후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외국인은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로 조사되지 않고, 불법 고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모두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경찰에 고발이 되었다.¹⁴⁴ 더욱이 최근 이루어진 무자비한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¹⁴⁵

당사국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피해자 식별지표와 건강보험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신매매의 위험이 높은 외국인들은 관리업체 혹은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현장에 동행을 하며 해당 기관의 사업장 실태를 공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도한다. 때문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시 제출한 지표를 근거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국의 조치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비실효적인 피해자 확인 시스템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처벌과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성매매 피해자 확인 절차를 거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다.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¹⁴² 근로감독관의 수는 여전히 부족하여, 근로감독관 1인당 대략 1,000여곳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현(2022.9.22.), “근로감독 실시 비율 30%대로 ‘뚝’...“신고해도 소용없다” 포기하는노동자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213410004406>

¹⁴³ 성도현 (2024. 3. 25) “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1천215억...근절 대책 필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5131800371?section=economy/job-foundation>; 당사국은 2024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전국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44곳이 문을 닫게 만들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방기하였다. 김태형 (2024. 4. 1)“"갑질 당하면 어디에 호소?"...늘어나는 이주노동자, 줄어드는 지원센터”,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404010513191680

¹⁴⁴ 법무부(2022.8.19.), “법무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 <https://www.moj.go.kr/bbs/moj/182/562235/artclView.do>

¹⁴⁵ 2023년 3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은 유명한 태국 가수가 공연하는 콘서트를 급습했고, 83명의 미등록이주민들이 강제퇴거 되었다. 같은 달, 이주민들이 종교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를 급습했고, 9명의 미등록 필리핀이주민들이 강제퇴거 되었다. 2023년 4월에는 단속 중에 상해를 입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추방되었다. 이재호 (2023. 5. 4) “예배당도 급습...한동훈 법무부 ‘이주노동자 단속’ 인권침해 속출”,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0424.html

들은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식별 지표’를 개발하고, 검사, 경찰,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외국인 공무원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활용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관련 기관이 피해자 식별을 할 의무는 없다. 그 결과, 공무원이 피해자 식별지표를 이용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지하게 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¹⁴⁶

당사국은 또한 공무원이 ‘피해구제가 외국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것’은 공무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은 그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미등록 외국인은 통상 신원 확인 및 보호가 아닌 단속 이후 구금이 되어 강제 퇴거를 당한다. 이에 유흥·마사지 단속에 ‘불법 외국인’을 추방하는 출입국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¹⁴⁷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피해자 증명서’를 받기까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 식별을 경찰의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장관의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¹⁴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출한 개인통보 사건에 대해 당사국의 의무 위반을 밝히며 이주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밝혔다.¹⁴⁹ 그러나, 당사국은 여

¹⁴⁶ 인신매매방지법 하에 피해자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한 첫번째 사례는 2023년 상반기, 시민단체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식별절차를 지휘·감독할 기관이 부재한 탓에 피해자들은 확인절차를 거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피해자가 피해자 확인서를 성공적으로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 지원 및 주거 지원은 일체 주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인신매매피해자 식별 절차가 수사과정과 완전히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등피해자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

¹⁴⁷ 일례로 태국 출신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피해자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들을 성매매 용의자로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사업장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당사국에 입국했고,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 경찰은 태국 여성을 상대로 한 인신매매 시도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여성들에 대한 피해자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을 성매매 가해자로 간주하여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태국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확인했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여성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2021. 4. 12)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648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C%9D%B8%EC%8B%A0%EB%A7%A4%EB%A7%A4&menuLevel=3&menuNo=91>

¹⁴⁸ 보고단체의 인신매매 식별절차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청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과 확인서 발급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확인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¹⁴⁹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3명의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2023. 11. 24)

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구제조치도 제공하지 않았다.

- 인신매매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인신매매 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인신 매매의 정의를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라
-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농업 부문 및 수산업 등 인신매매에 취약한 산업의 이주민을 대할 때에 출입국, 법 집행 및 사법 당국을 위한 인신 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법률지원, 심리상담, 거주지 및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전인적 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 피해자 지원 기관을 설립하되 여성, 장애 및 이주 배경을 가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

23 아동 체벌 금지

정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제출, 2021. 1. 26. 시행했다고 밝혔다.¹⁵⁰ 그러나 여전히 체벌 금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2022년 민법의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르는 성인이 78.8%였고¹⁵¹, 2023년에는 성인의 68%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¹⁵² 그리고 부모의 65%는 여전히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체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¹⁵³

한편 2022년 아동학대 행위자 중 부모가 82.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중이 81.3%에 달한다.¹⁵⁴ 그리고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의 수는 총 50명으로 파악되어, 전년도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폭언, 체벌 등이 계속되고 있고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¹⁵⁵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3/11/korea-failed-protect-three-filipino-women-trafficking-victims-and-ensure>

¹⁵⁰ 정부보고서, 제134항. CAT/C/KOR/6, para.134

¹⁵¹ 장나래, “민법 ‘자녀 징계권’ 폐지 1년 반…10명 중 8명 ‘알지 못한다’”, 한겨레, 2022.06.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8589.html

¹⁵² 김규철, “부모 징계권 삭제, 10명 중 7명 ‘몰라’”, 내일신문, 2023.06.14.

<https://www.naeil.com/news/read/463882>

¹⁵³ 전해진,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됐지만…부모 65% “훈육상 체벌 가능””, 동아일보, 2022. 06. 2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7/114166322/1>

¹⁵⁴ 보건복지부,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3.08.31. 29쪽.

¹⁵⁵ 보건복지부, <표 2-1-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현황, 2022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3.08.31. 66쪽.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8명	42명	43명	40명	50명

지금도 훈육을 핑계로 아동에게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일삼는 부모의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의 온몸에 멍이 들게 때리고 벌을 세운 부부 사건,¹⁵⁶ 아동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협박하는 등 상습 학대를 일삼은 부부 사건¹⁵⁷ 등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의 차원에서’한 불가피한 체벌이었다고 변명했다.

정부는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1주일 동안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¹⁵⁸ 그러나 훈육의 방법 중 하나로 여전히 아동에게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사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없다.

- 아동 체벌 금지의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홍보를 촉진하라.
-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제공의 기회를 증가시켜라.

24 군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군사 재판 및 영창제도 현황

비록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영내 폭행의 경우 무조건 기소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증가한 정도에 비하여 실형 선고가 0.09%에 불과하다.¹⁵⁹ 나아가 직접 가해자 외 지휘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부실하기만 하고, 의문사 등의 수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열리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4월 사망한 육군 일병의 사건에서,¹⁶⁰ 육군참모총장이 사임하기는 하였으나 사인 조작, 은폐에 가담한 부

¹⁵⁶ 이재현, “‘서열 무시해?’ 초등생 자녀 온몸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연합뉴스, 2024.04.13.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2096300062?input=1195m>

¹⁵⁷ 유영규, “‘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아동학대 읊으며 판사도 울먹”, SBS뉴스, 2024. 4. 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15877&plink=ORI&cooper=NAVER

¹⁵⁸ 정부보고서, 제136항. CAT/C/KOR/6, para.136

¹⁵⁹ 2016년~2020년 6월 사이 총 4,275건이 발생하여 2011년~2015년 6월까지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기소가 1,238건(28.9%), 선고유예가 51건, 집행유예가 127건, 실형은 4건(0.09%)에 불과하였다(소병철 의원실. (2020). 2020년 국정감사 자료); 일례로, 2021년 해병 병장이 후임 7명에게 침대 사다리에 매달리게 하고, 제설 작업 중 폭행하고, K-2 소총으로 때리고, 샤워장에서 알몸으로 전투수영 자세를 시켰음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NEWSIS, 2022. 7. 22).

¹⁶⁰ 고 윤승주 일병은 2014년 3월부터 약 1달 간 이어진 고문, 성추행 등으로 끝내 사망하였다. 그러나

대 지휘관, 부검의, 수사관 등은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한편, 군 성폭력 사건에서도 불처벌이 만연하다. 2022년 기준 상당수의 가해자(65%)는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¹⁶¹ 심지어 성추행 피해자와 신고자의 경우, 상관모욕과¹⁶²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¹⁶³ 일례로, 2022년 성추행 가해자의 강요로 타 군인의 숙소에 들어간 여군이 주거침입으로 2023년 3월 기소유예를 처분받아, 피해자가 군을 떠나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¹⁶⁴

2022년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항소심이 민간으로 이관되고, 심판관과 관할관이 평시 폐지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이후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와 성범죄는 수사와 재판은 모두 민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성범죄에 대한 2차 피해 범죄 등은 여전히 군대에서 처리하고 있다.¹⁶⁵ 더구나 국방부장관이 재판권을 군사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¹⁶⁶ 비록 비법조인 군인이 군사재판을 주재하던 ‘심판관’ 제도는 평시 폐지되었으나 군사법의 인적 독립성은 아직 요원하다. 군판사, 군검사 모두 여전히 국방장관과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 하에 있다. 즉, ‘군법무관’이라는 동일한 인력에서 선발되고, 순환된다. 1차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의 경우 부대 지휘관에게 종속된다. 한편, 현행법은 법리적 오류가 많다. 우선,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의 직접 원인을 어떻게 판단할지 군에서 결정하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 2023년 7월 홍수 피해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의 수사를 맡은¹⁶⁷ 해병대 수사단장이 상부의 범죄인지통보를 보류하라는 불법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육군은 최초 사인을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공표했다. 이후 구타 등으로 인한 뇌진탕이 원인이 되었음을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밝힌 바 있다(The New York Times, Aug. 6, 2014). 추가적으로 2022년 11월 고 김상현 이병 사망 당시에도 육군은 최초 ‘오발’이라고 발표하였으나 뒤늦게 폭언, 가혹행위가 있음이 드러났다(Yonhap News Agency, Feb. 8, 2023).

¹⁶¹ KOREA PRO. Apr. 6, 2023. 참고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적용된 사건이 국방부와 군 통계에서 누락됨에 따라, 군인의 성폭력 피/가해 사건 통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군인에 대한 사건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적용된 법령에 대한 포괄적 성범죄 통계만 있다.

¹⁶² 참고로 인권위는 2023. 8. 29. 「군형법」 제64조제(2)항(상관공연모욕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인권위 (2023).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제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의견 제출).

¹⁶³ 공군 소령이 상관의 성추행을 신고하였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2022년 4년 만에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MBC. Sep. 15, 2022); 2020년 3월 하사 3명과 중사 1명이 중위 1명을 성추행하였는데, 가해자들은 피해자보다 부대에서 오래 근무하며 쌓은 친분을 악용하여 탄원서를 모으고, 제보자를 색출하려 시도하기도 했다(Hankook Ilbo. Apr. 28, 2020).

¹⁶⁴ The Hankyoreh. Aug. 7, 2022. 성추행 사건은 공군 제15비행단에서 발생하였고,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가 성추행 사건 수사도 맡았다.

¹⁶⁵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제1호, 제2호.

¹⁶⁶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⁶⁷ 「군사법원법」 제264조(변사자의 검시) (1)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체일 때에는 군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 (4)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로 항명죄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¹⁶⁸

- 군 (성)폭력사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라.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폐지하라.
-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고 이때까지의 모든 비순정군사범죄를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라.
- 군검사, 군판사 등 수사·재판을 담당할 군법무관과 군사법경찰관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적절한 민간 당국으로 이전하라.
- 국방부 장관의 재판권 개입 근거 삭제하라.

25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및 비자의 입원 조치 현황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입법 개선의 시한을 두지 않아 여전히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대안으로 ‘동의입원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의입원의 경우 퇴원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자의 입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부통계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어 현행 시스템 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는다.¹⁶⁹ 특히 복잡한 입원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증세가 없는 지적장애인 등을 ‘동의입원’ 조치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¹⁷⁰ 이는 정신병원 입원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치료 필요성’, 내지는 ‘입원 필요성’의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일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입원 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2인의 진단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① 예외적으로 사정이 있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¹⁷¹, ② 다른 병원의 전문의 진단 시 서면으로

¹⁶⁸ 사망한 해병 대원은 구명조끼조차 없는 상태로 급류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해당 대원의 지휘관인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판단해서 8. 2. 민간 경찰에 이첩하였다. 피고인은 7. 30. 국방장관 등에게 7. 31. 있을 수사결과(요약)를 설명하여 장관 결재까지 받았다. 그렇지만 수사 책임자였던 해병 대령은 사건을 이첩하였다는 이유로 8. 2. ‘집단항명죄’로 입건되어, 10. 6. 끝내 기소되었다(The Korea Times. Aug. 11, 2023; The Korea Herald. Sep. 11, 2023; The Yonhap News Agency. Oct. 6, 2023). 현재 ‘항명죄’로 죄명이 바뀌어 재판이 진행중이며, 국회는 관련하여 특별검사법을 발의, 5. 2.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참고로 피고인은 공영방송에 출연하여 입장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국방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죄로도 기소되었다.

¹⁶⁹ 국가인권위원회, 2021. 6. 3.,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8., 정신의료기관의 처벌 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입원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¹⁷⁰ 한겨레, 2022. 11. 23. [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국가인권위원회, 2021. 8. 17. [“지적장애인 자의·동의입원 절차 개선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

¹⁷¹ 국립정신건강센터,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진단하거나 형식적인 진단에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은 보장될 수 없다. 또한 강제입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독립적인 외부기관은 전무하다.

정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를 통해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입적심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입적심은 월 1회 이상 개최로만 규정되어 있고, 개최되기까지 소요시간이 평균 21.1일로 입원한 당사자의 입적심 결과가 입원 기관에 통지되기까지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강제로 입원되어야 있어야 하며 다른 대안이 없다. 또한 전체심사건수에서 24.9%만이 대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입적심 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1.41%밖에 되지 않는다.¹⁷²

대면조사제도는 신청주의로 운영되어 권리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대면조사에 대한 인지조차 할 수 없다. 입원연장심사로 퇴원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으며, 퇴원 및 처우개선 심사도 퇴원하는 비율이 4%대에 그쳐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인신보호법에서의 인신구제청구는 2018년 기준 퇴원율이 6.6%에 불과해 극히 소수다.¹⁷³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2019년 진정 접수된 22,776건의 사건 중 불법 입퇴원 58.5%, 부당한 격리강박 7% 등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과반수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진정된 사건 중 인용은 6%에 불과하며 22%의 사건은 기각되고 72%의 사건은 각하되어¹⁷⁴ 인권을 보장하는 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과 ‘동의입원’을 전면 폐지하라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주 1회 심사 개최, 대면심사 의무화, 전문의 2인 입원 진단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 폐지 등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입원 과정을 개선하라
-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시스템 안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26 테러방지법

정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조치가 형사소송법 등 한국의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인권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인권보호활동이 수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위험인물’, ‘대테러활동’, ‘대테러조

¹⁷² 이만우,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Vol. 91, 32p

¹⁷³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164p

¹⁷⁴ 국가인권위원회, 2021,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 54p

사’ 등 개념은 모호하여 정보수사기관에 의해 그 개념이 자의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¹⁷⁵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하는 절차가 대테러활동 및 대테러조사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장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을 할 수 있다.¹⁷⁶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영장없는 정보수집 및 추적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기구가 구성되어있지 않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¹⁷⁷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가 규정하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정부기관으로 구성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인데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활동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¹⁷⁸

한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수사기관은 2018년 한 외국인을 구속기소한 사실이 있다.¹⁷⁹ 1심 법원은 위 외국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2019년 무죄를 선고한 상황이며, 위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¹⁸⁰

181

- 영장없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등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폐지하라.
- 국가정보원 등의 대테러활동 및 조사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적 감독 절차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 테러위험인물 지정에 있어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라.

¹⁷⁵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 제6호, 제8호,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493&lang=ENG

¹⁷⁶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제1항,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lang=ENG&hseq=59856

¹⁷⁷ 서울경제, “[탐사S] 대테러 방지 위해서라지만…영장없이 36시간 금융·통신거래 추적에 감청까지”, 2020. 5. 20.,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TNGSOFD>

¹⁷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7조, available at: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57493&lang=ENG

¹⁷⁹ 수사기관은 공판과정에서 위 외국인이 자녀 출산으로 인해 가족을 만난 것을 테러조직원 접촉시기라고, 위 외국인이 근무하던 폐차장의 도구들을 ‘사제폭탄’의 재료라고, 핸드폰에 자동 저장된 사진들을 ‘테러 단체로부터의 지령’이라고 주장했다. 위 외국인은 수사단계부터 테러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¹⁸⁰ 연합뉴스, “검찰 ‘첫 테러방지법’ 시리아인 무죄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2019. 7. 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2099600065>

¹⁸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2019. 7. 12., <https://www.minbyun.or.kr/?p=43049>

27 코로나19 시기 교도소, 병원, 기타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조치

코로나19시기 병원,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조치

집단 시설의 감염병 취약성은 한국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는 입원환자 102명 중 101명이 확진되었고¹⁸², 장애인 거주시설 내 누적 확진자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10%p~23%p 높게 나타났다¹⁸³.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긴급 탈시설’¹⁸⁴이 아니라 오히려 시설의 폐쇄성을 높이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광범위한 시설에 강제하였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 - 요양병원, 요양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 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금지를 위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질병관리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¹⁸⁵.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발생시 ‘예방적 코호트 격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방지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 더 나아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해 발생한 시설 수용자들의 피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경우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감염 예방 조치와 정보제공이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진단과 확진자와 접촉자 조사 및 격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117명이 거주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신아재활원은 코로나19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비확진자와 제대로 격리 조치 하지 않아 집단 감염을 방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는 시설 내 당사자와 외부의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유엔장애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으나¹⁸⁶, 한국 정부는 미흡한 조치만 이행

¹⁸² <https://www.bbc.com/korean/news-51640056>

¹⁸³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25.9%이었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다.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이다. (출처: 장혜영 국회의원실-<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I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c6ImtleXNlbnQ3M6MTI6luqxsOyivOyLnOyEpCI7fQ%3D%3D&bmode=view&idx=11479444&t=board>)

¹⁸⁴ CRPD/C/5

¹⁸⁵ 국가인권위원회.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2023.04.12.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9006&menuLevel=3&menuNo=91&fbclid=IwAR0cr69zBEJop--mMd7R8Z4h0ZywaoxRle5hmcuyFUzagDkmaiK_oJaIDGM

¹⁸⁶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586>

하고 다른 시설로 사설 거주인 전원을 이주시킨 후 며칠만에 다시 이들을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잔여한 신아원으로 복귀시켰다¹⁸⁷.

코로나19 시기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조치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부터 교정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교정시설을 외부로부터 전면 봉쇄하는 것 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정시설에 이루어지는 조치들과 수용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문제제기되어온 과밀수용, 열악한 위생환경, 부당한 의료적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¹⁸⁸ 특히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을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투입했고, 이러한 작업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및 휴일에도 이루어졌다.¹⁸⁹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000명 넘는 수용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¹⁹⁰ 이후 일부 수용자가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기도 했다.¹⁹¹ 특히 일부 수용자는 고령 등 취약한 수용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일부 수용자들은 집단감염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¹⁹² 사망한 수용자의 유가족들에게는 국가 차원에서의 사과, 배상 등은 제공되지 않았다.¹⁹³ 한편 사망한 수용자는 지침에 따라 유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화장처리 되었고, 이에 유가족들은 사망한 수용자의 시신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¹⁹⁴

집단감염 사태에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상황을 막기위한 적합한 대응 지침은 부재했고, 코로나19 확산 및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및 감염병 전문가가 부재했으며, 교정시설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과밀수용’과 ‘혼거수용’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했다.¹⁹⁵

¹⁸⁷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27>

¹⁸⁸ COVID-19 Human Rights Response Network. Covid19 and Human Rights - Social Guideline for Human Dignity and Equality, 2020, pp. 172-180

¹⁸⁹ The Dong-a ilbo, "Prisoners are also making masks... Yeosu Correctional facility plan to supply more than 10,000 copies,"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319/100239822/1>

¹⁹⁰ Yonhap News Agency, "More than 180 virus cases reported at Seoul detention center.", . 19 December 2020, <https://en.yna.co.kr/view/AEN20201219002500320>

¹⁹¹ Korea Times, "Another inmate dies at detention center", 31 December 2020,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4/05/113_301777.html

¹⁹² MAEIL BUSINESS NEWSPAPER, "Another Lawsuit for Compensation by Inmates from Eastern Detention Center COVID-19 Outbreak Rejected", 29 November 2023, <https://www.mk.co.kr/news/society/10886566>

¹⁹³ OhMyNews, "National Compensation Claim for COVID-19 Prison Outbreak Deaths", 4 January 2024,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90937.

¹⁹⁴ Yonhap News Agency, "Families of Deceased from 'COVID Prison Outbreak' at Eastern Prison File Lawsuit Against the State", 4 January 20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104076300004>

¹⁹⁵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Chang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Post-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이 제시하는 비구금적 대안조치, 취약집단의 석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수용자는 소통할 권리와 필요한 외부진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지 못했다.

-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예방적 코호트 격리’로 인한 모든 집단 수용 시설(정신병원 폐쇄병동,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내 피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라.
-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긴급탈시설 등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라
- 정부는 감염병에 확진된 집단 시설 내 거주인이 시설 유형에 무관하게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
- 정부는 집단 시설 내 감염 피해자와 사망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배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 정부는 수용시설 내 코로나 19 감염 및 사망자 현황, 통계 및 관련 정책 및 지침 등의 공개를 포함하여, 수용시설 내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행정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감염병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 비구금적 조치를 개발하고 도입하라.
- 코로나19 시기에 사망한 수용자를 화장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점과 인정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라.

추가 이슈

28-1 탈시설

협약이 장애, 연령, 국적 등의 차별에 기반한 시설 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시설 정책의 부재와 지역사회 제도의 미비는 시설 입소 과정과 시설 내부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서는 입원 과정 및 시설 내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사실상 장기적인 거주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

효성있는 탈시설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는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된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제외되어 있고, 정부가 당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은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으로 수정되어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2024년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의 상한을 최장 36개월로 제시하는 등 시설 수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미달된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

- 시설 수용이 장애, 연령, 인종 및 이주자 신분 등 지위와 특성에 따른 차별에 기초한 행위이며, 고문 및 학대 행위임을 인정하고, 시설 수용 정책을 중단하라.
- 장애인, 아동, 이주민 등에 대해 시설 수용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구체적 계획 및 예산을 반영하여 “탈시설로드맵”을 제시하라
- 수용 시설 피해자들의 구제 및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재할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에 대한 실효적 권리를 보장하라

28-2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도

한국에서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²⁰⁴ 이후 2019.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었고, 2020. 10. 26.부터 대체복무제도가 시행중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 도입 이전 처벌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어떠한 구제수단²⁰⁵도 마련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협약이 금지하는 잔혹한 처벌이므로, 그 피해자들에게는 효과적인 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²⁰⁶

한편 대체복무제도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대체복무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징벌적인 제도로 비판받고 있다.²⁰⁷ 대체복무제도는 현역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대체역 위원회가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속해있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이고, 복무장소를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합숙근무를 강제하고 있다. 즉 현행제도는 대체복무를

²⁰⁴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등 결정.

²⁰⁵ 전과말소, 적절한 보상 등(Human Rights Committee, Views adopted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5 (4) of the Optional Protocol, concerning communication No. 2846/2016, CCPR/C/128/D/2846/2016).

²⁰⁶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3: Implementation of article 14 by State parties, CAT/C/GC/3, 13 December 2012, para. 5.

²⁰⁷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is new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27 December 2019, <https://www.amnesty.org/en/latest/press-release/2019/12/south-korea-alternative-to-military-service-is-new-punishment-for-conscientious-objectors/>

선택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비인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제도의 징벌적 성격으로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나타나고 있다.²⁰⁸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부정하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²⁰⁹

- 대체복무제도 시행이전 처벌 받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전과기록 말소, 충분한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라
- 현역 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
-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을 군 복무기간의 1.5배 이하로 축소하고, 복무장소를 교정 시설 외 병원, 사회복지시설, 환경 시설 등으로 확대하라

28-3 성소수자

위원회²¹⁰와 고문 특별보고관²¹¹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원치 않는 불임 수술을 받도록 요구받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한국에서는 2006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적 성별 변경과 관련한 조사사항을 법률이 아닌 대법원이 정한 예규로 제시하고 있다. 재량권을 의미하는 '조사사항'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은 이를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트랜스젠더 - 결혼하지 않은 성인 중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호르몬 치료를 받았으며 불임 수술을 받은 사람 - 만 성별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수술 요건은 트랜스젠더에게 성별 인정을 위한 차별적이고 신체침습적인 수술을 강요하고 재생산 권리도 제한한다.

한국에서 간성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다. 통계적으로 국내 신생아는 연간 약 2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0.1%인 약 239명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²⁰⁸ 국회입법조사처, “대체복무제 시행 3년, 여전히 제도의 ‘징벌적 성격’ 논란”, 이슈와 논점 제2186호, 2024, 4쪽.

²⁰⁹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등 결정

²¹⁰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China with respect to Hong Kong, China, 3 February 2016, CAT/C/CHN-HKG/CO/5, at para 28.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transgender persons are required to have completed sex-reassignment surgery, which includes the removal of reproductive organs, sterilisation and genital reconstruction, in order to obtain legal recognition of their gender identity.”)

²¹¹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 February 2013, A/HRC/22/53. (“In many countries, transgender persons are required to undergo often unwanted sterilization surgeries as a prerequisite to enjoy legal recognition of their preferred gender.”)

다양한 인터섹스 변이가 있으며, 인구의 최대 1.7%까지 추정된다. 따라서 인터섹스 신생아의 수는 연간 3,910명에 달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자녀의 법적 성별을 남성과 여성 중 선택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나중에 이 성별을 변경하려면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회화 및 공교육 과정에서도 부모와 교사 등 성인이 자녀를 성별 이분법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의 법적 성별을 결정하고 비가역적 수술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의 전제 조건으로 비자발적 불임 수술, 비자발적 의료 조치 등 기타 신체침해적인 요건을 제외하라.
- 인터섹스, 특히 유아, 어린이, 청소년인 인터섹스에게,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시행되는 불필요한 의료 개입을 금지하여 인터섹스의 신체적 완전성을 보장하라.

28-4 기업과 인권

당사국은 공기업·공공기관을 비롯한 관할권 내의 모든 기업이 협약상 금지된 행위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법적 및 정책적 체계의 부재로, 당사국의 관할권 내 기업들은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계속하여 기여하거나 야기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국내 기업들은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강제노동과 착취로 생산된 소금을 계속하여 거래해 왔다.²¹² 또한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후와이트라트 활동가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인권단체 및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²¹³ 국내 기업의 네옴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²¹⁴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²¹⁵

- 당사국은 관할권 내 모든 사람의 인권을 기업을 비롯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얼룩진 해외개발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하는 당사국의 행위는 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 기업이 협약상 금지된 행위를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도록 인권실사를 의

²¹² 한겨레, ‘강제노동’ 천일염이 대기업 거쳐…소금은 밥상에 이렇게 온다, 2023. 11. 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16826.html>.

²¹³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공동서한, UA KOR 2/2023, 2024. 4. 28.,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8040>.

²¹⁴ 국토교통부, 네옴 첫 아시아 전시회, 한국서 열린다, 2023. 6. 7.,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405.

²¹⁵ 한국금융신문,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핵심 글로벌 수주 프로젝트 역량 집중” [2024 신년사], 2024. 1. 1.,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401012128375521ee0209bd21_18.

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 당사국의 관할권 내 기업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독립기구를 설립하라.
- 당사국의 관할권 내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사법적 및 비사법적 구제 접근을 보장하라.

28-5 시설수용 및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의 권리

한국은 일제강점기, 전쟁,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를 겪은 국가이다. 많은 국민들이 그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국가폭력을 겪었다. 정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조사하거나 기소하기 위한 책임규명 절차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긴급조치 사건, 강제 징집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정부 주도 해외입양 등 대부분의 과거사 사건에서 불처벌이 용인되어왔다. 특히 시설수용자들이 겪는 인권침해는 현재에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사와 시설수용은 자의적인 구금과 각종 학대로 구성된 대표적인 고문 및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다수의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들은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또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고문 및 학대행위에도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가 어려웠다.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장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특별보고관이 2023년 발표한 방문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권고하였지만, 권고사항 대부분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²¹⁶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보상 등 구제를 위해 설립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 5. 27. 진실규명조사를 시작하여 2025. 5. 26. 조사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2023. 12. 31.을 기준으로 조사진행중인 사건이 9,899건에 이르는데, 일부 사건들은 조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는 2022. 12. 9. 진실규명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²¹⁶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Fabián Salvioli, A/HRC/54/24/Add.1, 6 July 2023.

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기간 내에 진실규명과 구제를 위한 진정을 접수하지 못한 상황이다.²¹⁷

한편 대통령이 임명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편향된 시각에서 과거사 피해자들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시하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부정의하다”, “민간인 희생이 불법희생이 아닌 부수적 피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위원장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을 뒤집기 위해 재조사를 지시하거나,²¹⁸ 한국전쟁시기 학살된 일부 민간인 피해자들을 ‘좌익세력의 부역자’ 등으로 지칭하며 피해자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²¹⁹ 그 결과 위원회는 2024. 5. ‘진도사건’ 희생자 41명 가운데 35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지만, 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보류(피해자 미인정)’ 결정을 했다.²²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재할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예산, 인력을 감축했다²²¹. 지역적으로는 광주와 제주도 두곳에 한정되어 센터가 운영중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접근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본 등 다른 국가 또는 기업 등이 개입한 고문 및 학대행위의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가해기업들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공익재단을 통해 원고들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일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 또는 일본기업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²²²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²²³ 당사국은 '2015년 한일합의'가 공식합의라는 입장 외에 피해자들

²¹⁷ 비마이너, “시설수용 생존자, 피해자 19명 더 찾아냈지만… 진화위 “직권조사 어렵다”, 2023. 5. 27.,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25>

²¹⁸ 경향신문, “‘몰래 재조사’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사 단체에 피소”, 2024. 3. 21.,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211347001>

²¹⁹ 한겨레, “Under conservative chief, Korea’s TRC brands teenage wartime massacre victims as traitors”, 2024. 4. 30.,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1138775

²²⁰ 연합뉴스,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중 진도학살 희생자 일부 피해 인정 보류”, 2024. 3. 12.,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143800004>

²²¹ 제주의 소리, “국비 3분의1 토막 국가트라우마 치유센터...유탄 맞는 제주분원 ‘발등의 불’”, 2023. 9. 3., <https://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18847>; 한겨레 “‘말로만 5·18’…정부, 광주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인력 대폭 감축”, 2024. 3. 31.,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34571.html>

²²² 한겨레, “돈만 받으면 됐지 사과까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입장이다”, 2023. 8. 2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5731.html

²²³ 서울고등법원 2023.11.23. 선고 2021나2017165

의 배상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²²⁴ 불처벌의 용인, 배상 및 재할의 부재,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결여 등은 과거사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까지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수용 등 고문 및 학대행위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시설 수용은 장애, 연령, 국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른 차별적 격리 정책으로, 그 자체가 고문 및 학대에 해당한다. 과거 부랑인 수용소에 갇혔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어 있다. 2021년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마련되었지만,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은 이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제 인권 기준과 달리 완전한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시설 소규모화 및 이에 대한 투자를 전제하고 있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 의회에서는 2년간 시행된 탈시설 조례가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²²⁵

-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를 공적으로 기록하라
- 과거사 및 시설수용 가해자에 대한 범죄수사, 기소 및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규명절차 또는 기소절차를 수립하라
-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정접수기간, 활동기간을 연장하라
-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중심적접근의 방식에 따라 편견없이 과거사 문제를 진실규명하라.
-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
- 강제동원 피해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방식으로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라.
- 시설수용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탈시설로드맵을 개선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시에 개선된 로드맵을 시행하라.

²²⁴ 한겨레, “유엔 특별보고관,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정부 “한일 합의 존중””, 2023. 9. 14.,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8511.html

²²⁵ 에이블뉴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물꼬튼 ‘탈시설 조례’ 폐지 기로, 2023. 3. 22.,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33>